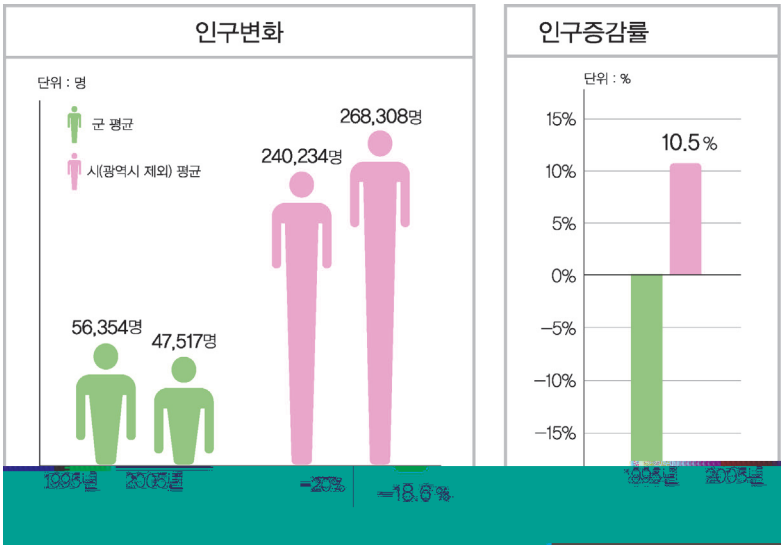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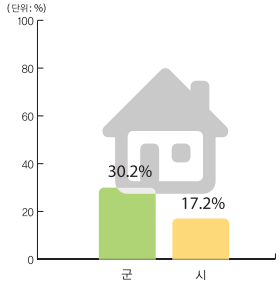
Ⅲ 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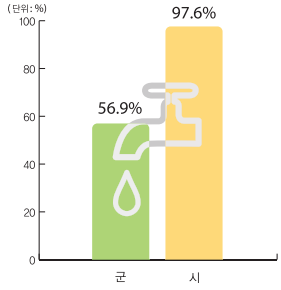
친서민 국민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1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생활권은 지역주민의 교육, 의료, 복지 수요가 충족되고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기반이 필요한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초생활권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1995년~2005년 기간에 무려 18.6% 급감하였으며 고령화율도 21.6%에 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의료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종합병원, 의료진의 90%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상수도, 하수도, 주거환경도 부실하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0.2%에 이르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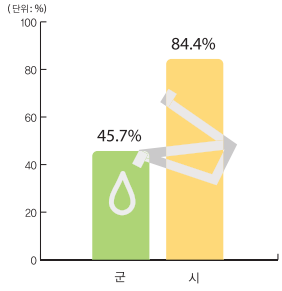
〈 20년 이상 노후주택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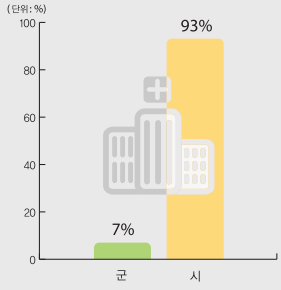
〈 상수도 보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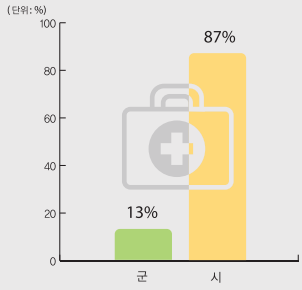
〈 하수도 보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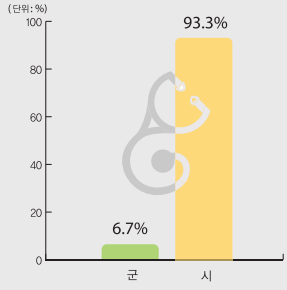
〈 종합병원 〉



〈 병상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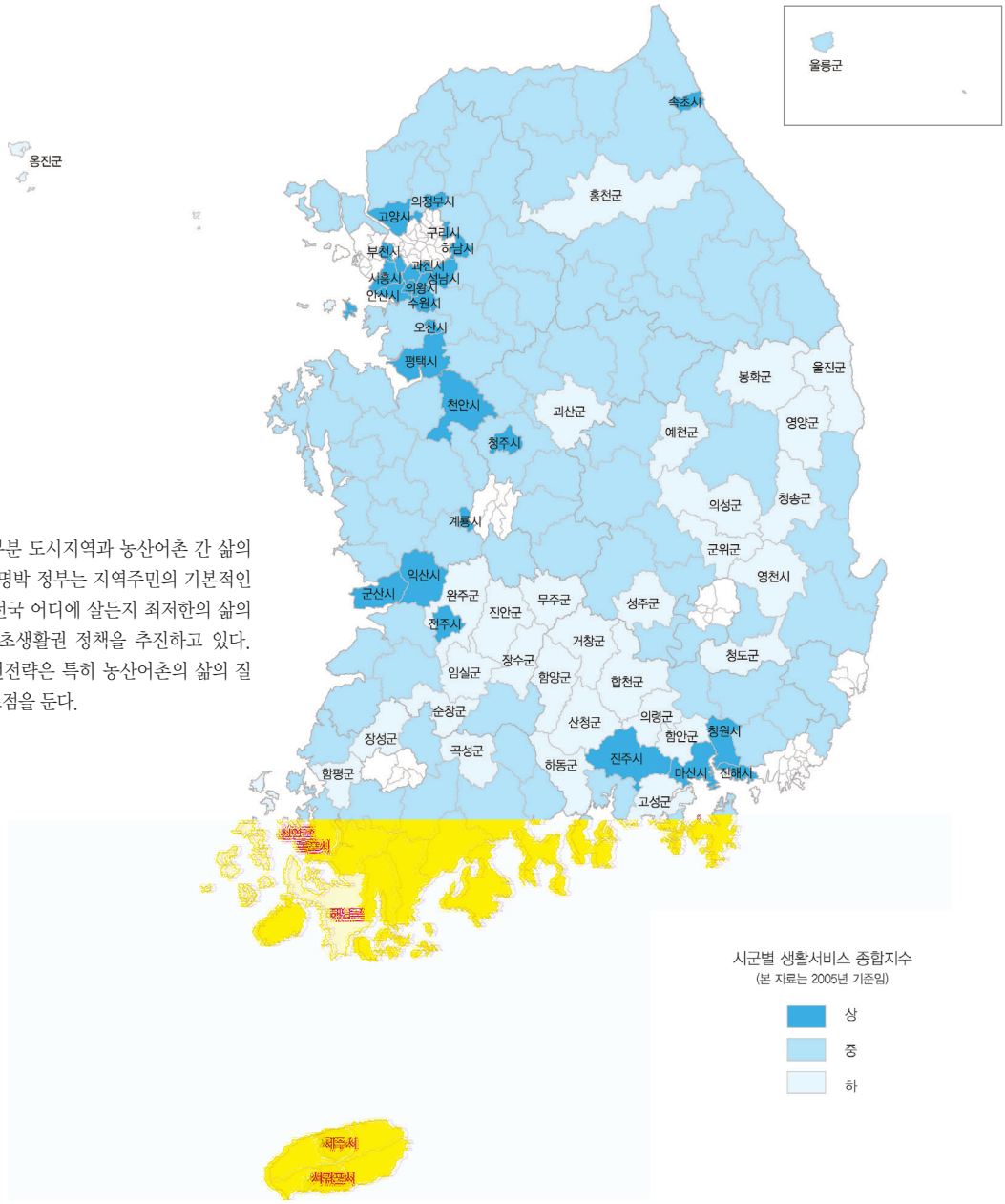


〈 의료인력 〉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는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별로 삶의 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 금융 등 8대 부문의 생활서비스 실태를 종합하여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순위를 매겨보면, 상위 30개 지역에는 다수의 일반시와 소수의 도농통합시가 속하는 반면, 하위 32개 지역에는 1개 시를 제외한 모든 군지역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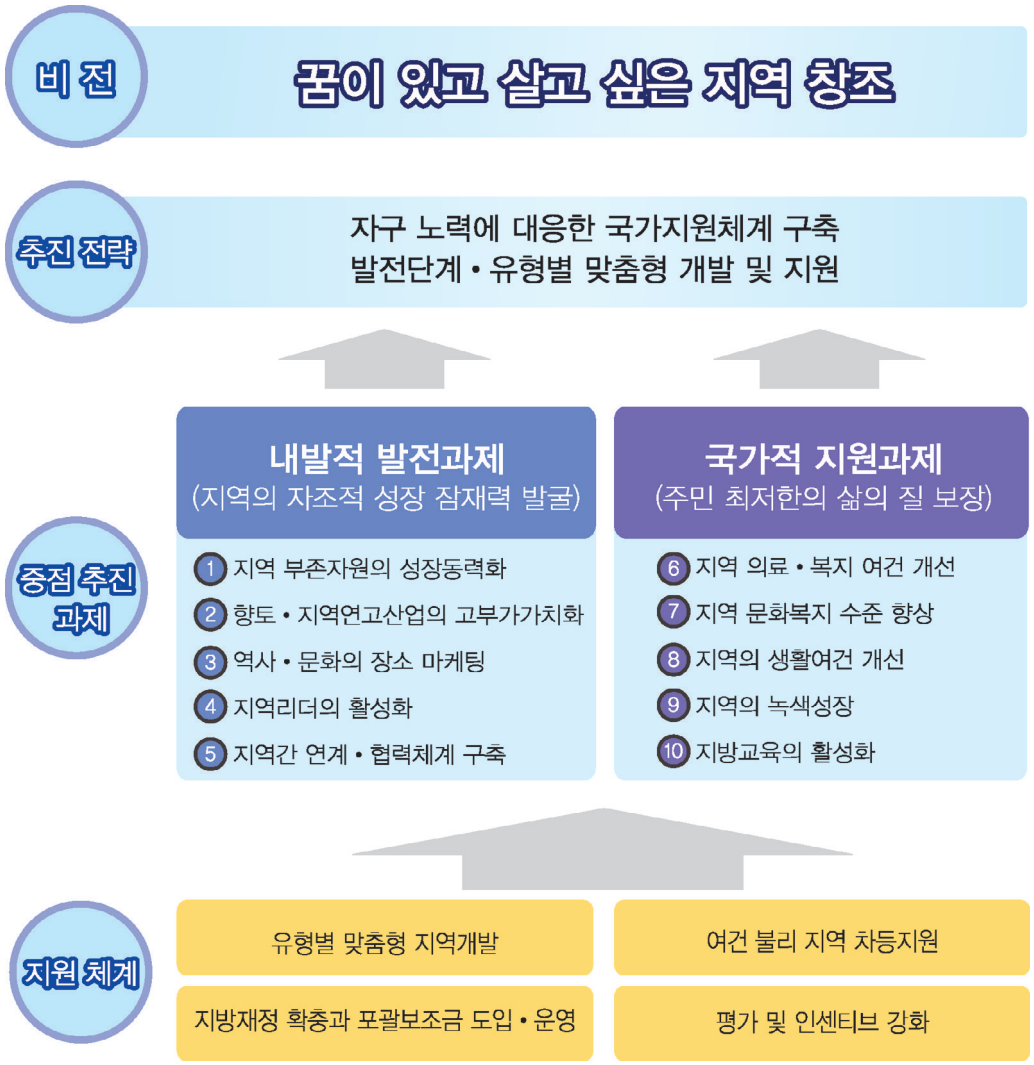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간 삶의 질 격차에 기인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은 특히 농산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이명박 정부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최저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를 지향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스스로 발전하는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지역적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향토산업 및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간 연계·협력 구축 등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문화복지 향상, 교육경쟁력 강화, 생활여건 개선, 녹색성장형 시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당면 현안인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보장에 중요한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과 10대 중점과제〉



기초생활권 10대 중점과제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내발적 발전 5대 과제와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5대 과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0대과제별로 성공사례가 다수 존재하기에, 지방 스스로의 발전노력과 국가적 지원정책의 결합을 통해 시 · 군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녹색성장의 추진
축분 바이오가스 생산

지역간 연계 · 협력 체계 구축
이천 광역자원회수처리시설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4대강 정비사업

지역 의료 · 복지 여건 개선
구미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향토 · 지역연고산업의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고창의 복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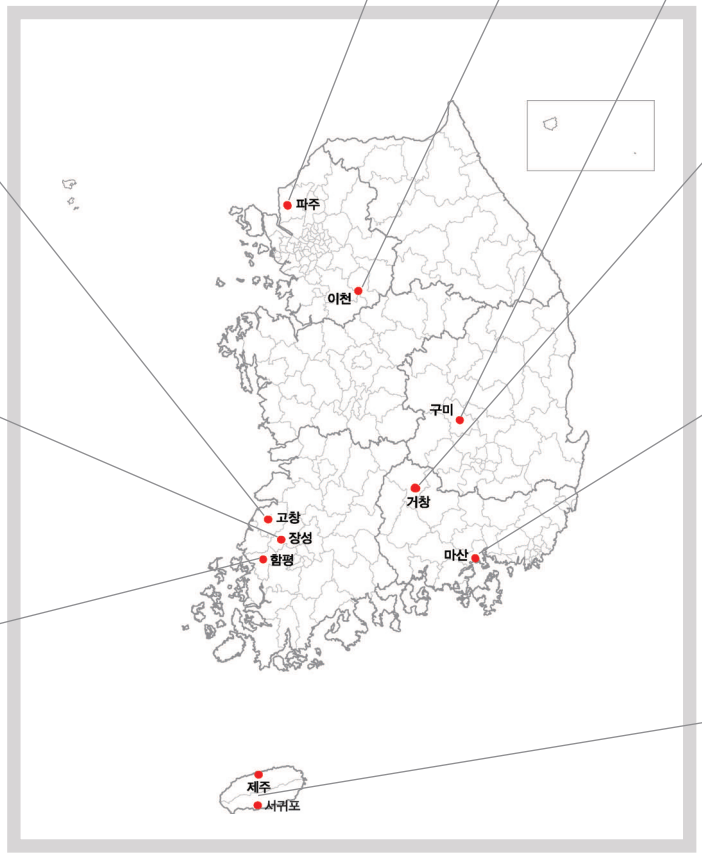
지방교육의 활성화
거창 교육특구

지역리더 활성화로 발전동력 구축
장성아카데미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마산 청소년문화센터

역사 · 문화의 장소 마케팅
함평 나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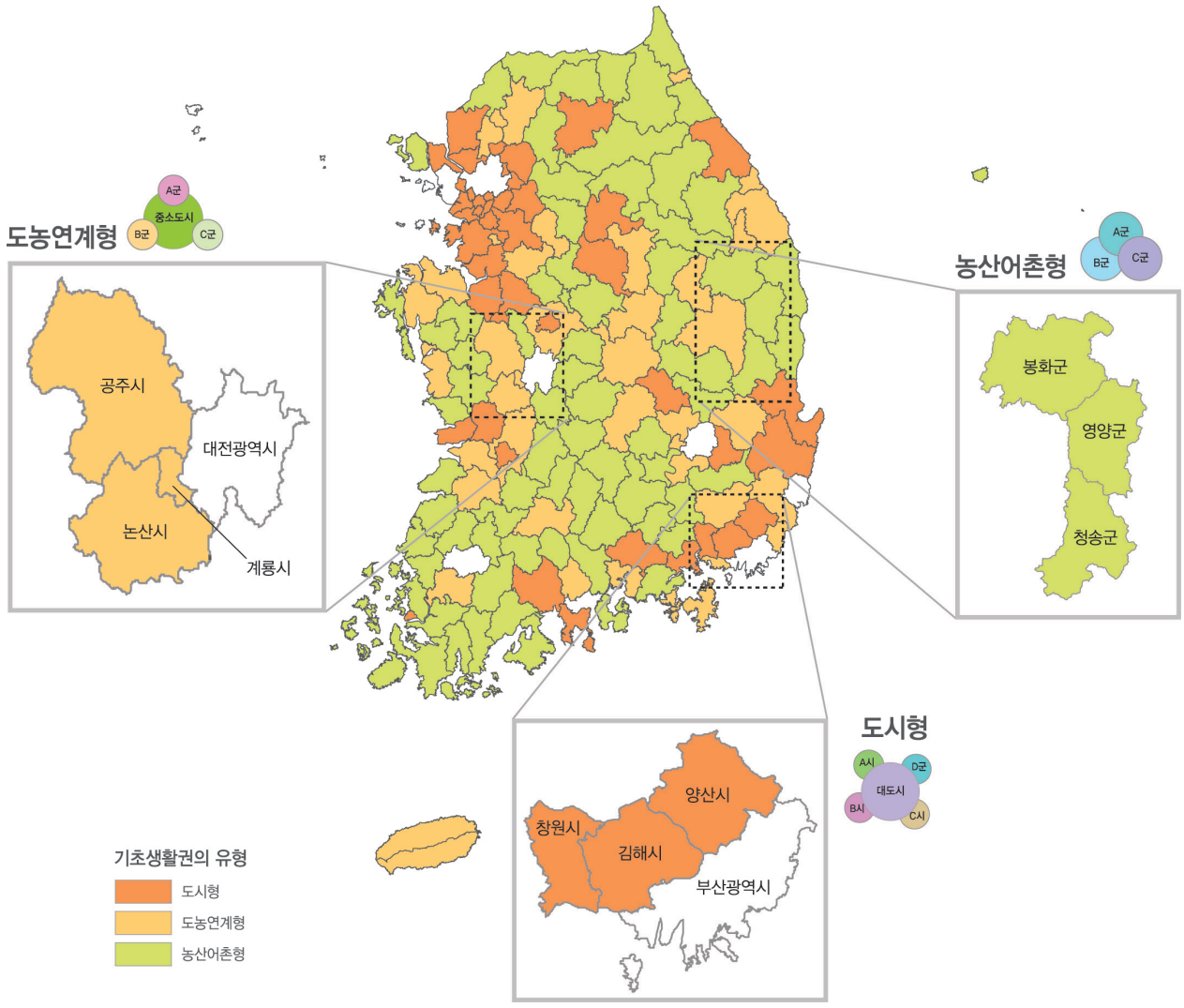
지역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제주도 올레길



맞춤형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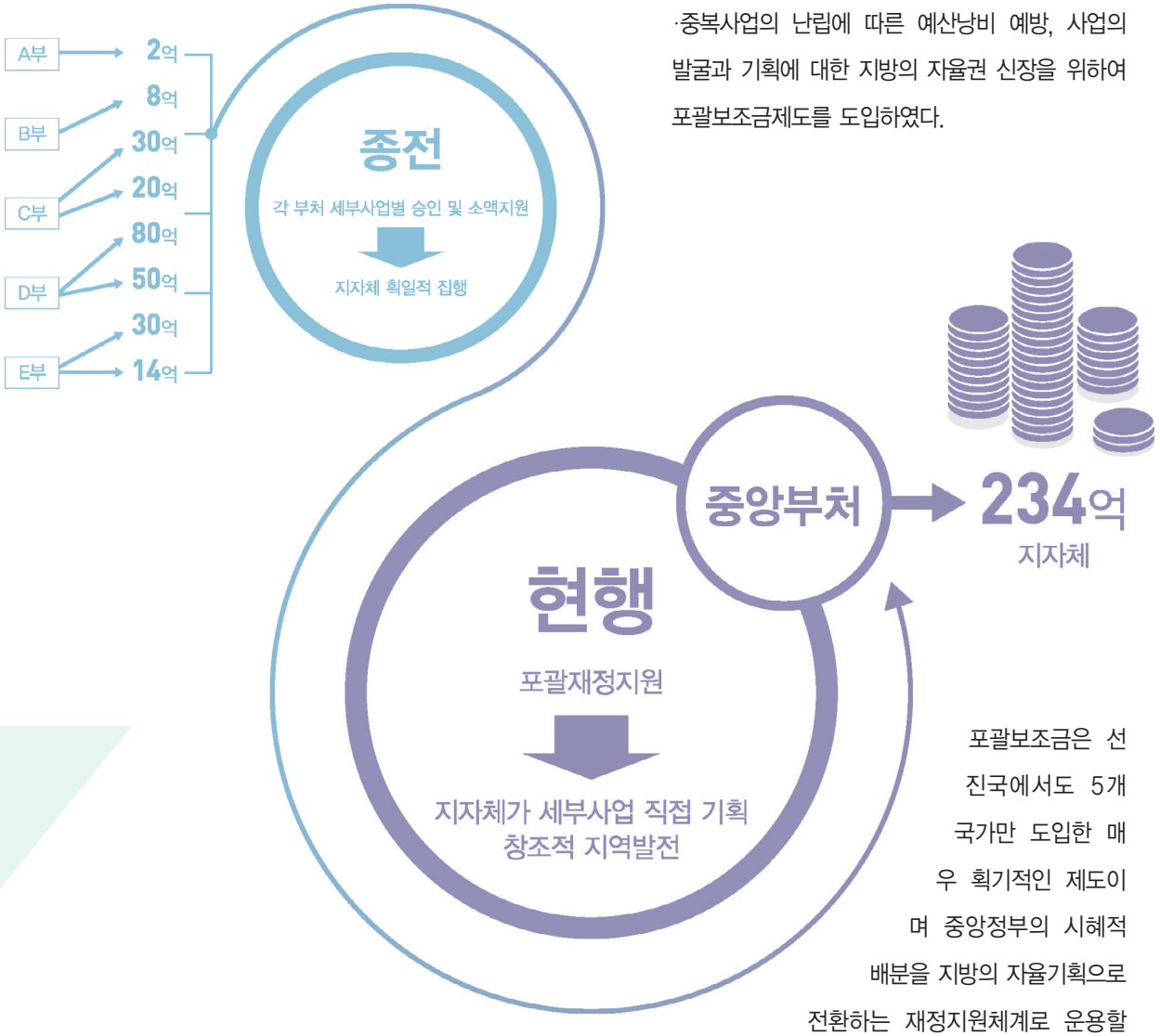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규모, 지역경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권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인구, 소득,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에 차이가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 다르며 애로사항이나 발전여건 등에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맞춤형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은 인접한 지자체와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발전을 추진한다. 도시형은 구도심의 재생 등 도시의 활력을 증진토록 맞춤형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유형화(예시)



선진형 재정지원체계 구축 및 포괄보조금 도입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에 입각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지침으로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자치계획권을 복원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 사업의 발굴과 기획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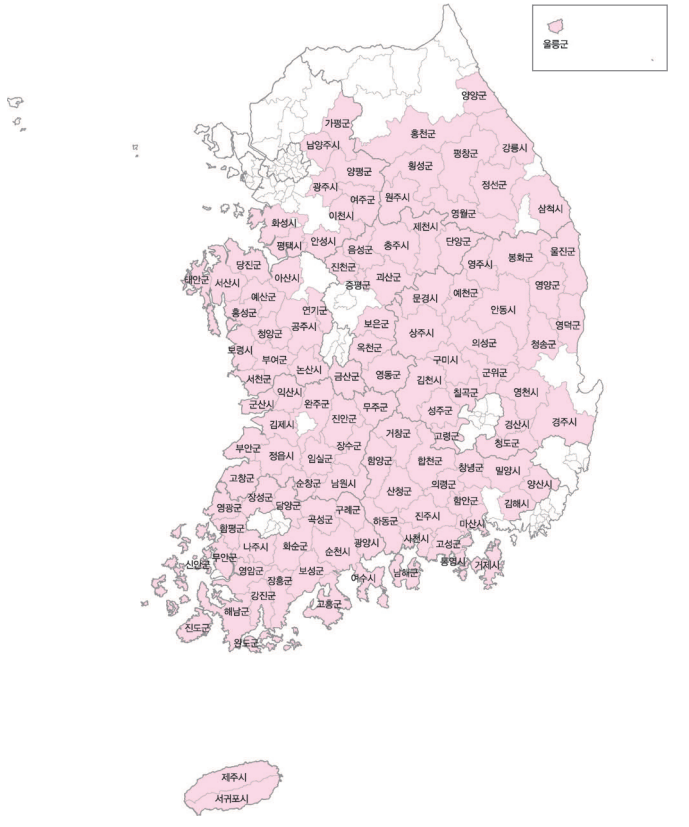


포괄보조금은 선진국에서도 5개 국가만 도입한 매우 획기적인 제도이며 중앙정부의 시혜적 배분을 지방의 자율기획으로 전환하는 재정지원체계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0여개 사업을 24개 포괄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은 부존자원과 잠재력을 살려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특화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건 불리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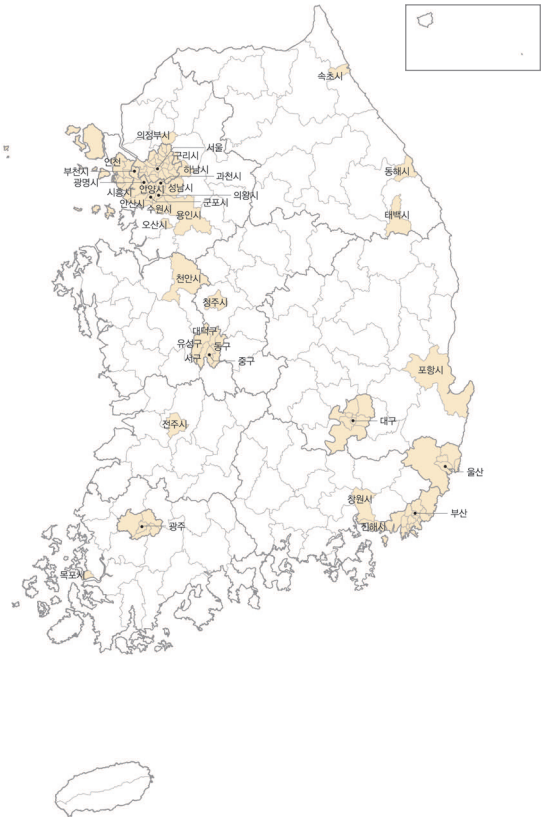
기초생활권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대상지역을 특수상황지역(행정안전부), 일반농산어촌(농림수산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해양부), 성장촉진지역(국토해양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성장촉진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일반농산어촌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어촌이 우세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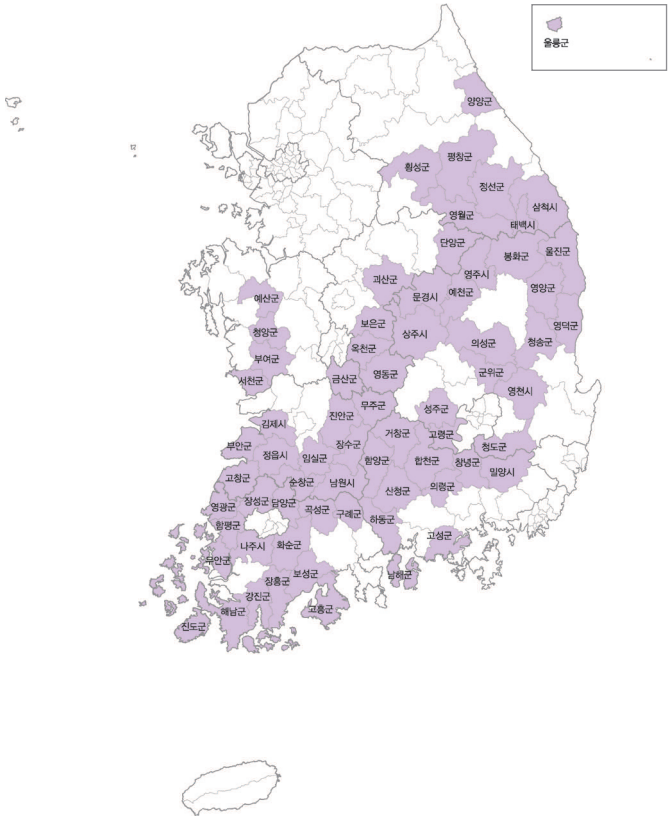
도시활력증진지역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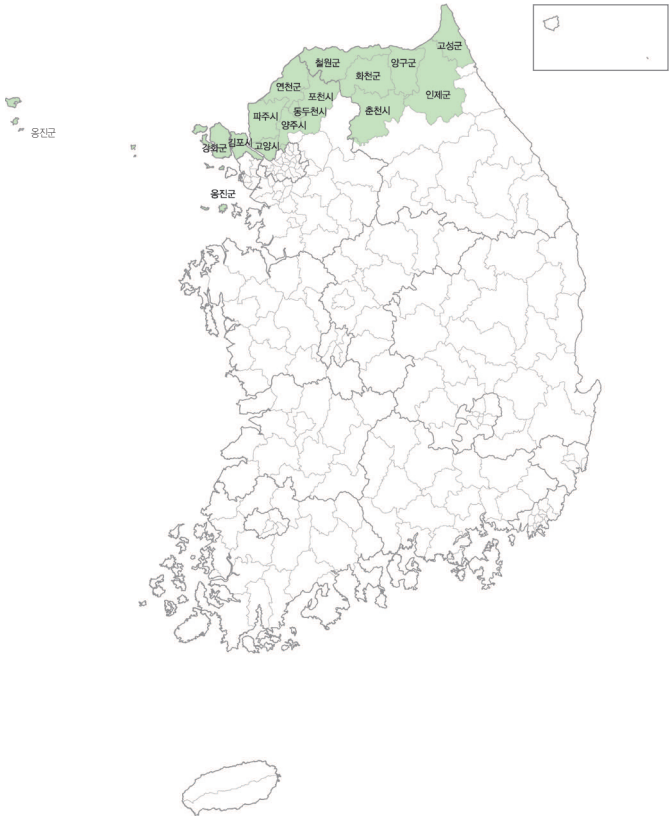
'국민통합과 친서민적 공간정책'의 일환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합리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 · 군 지역

특수상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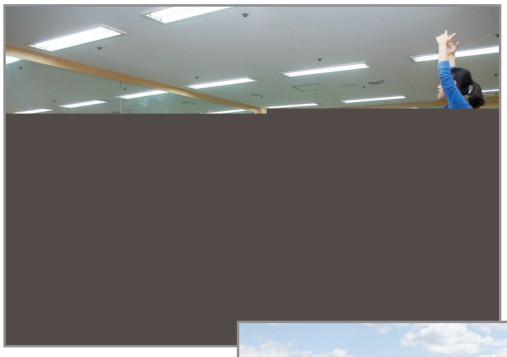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여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시 · 군 지역

농어촌서비스 기준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약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농어촌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은 도 · 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정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선진화 된 시책으로 다가갈 것이다. 목표연도 2014년의 주요한 '농어촌 기초 서비스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거** : 주택의 90% 이상이 최저주거기준 만족 등
- **교통** : 도보 15분 거리 내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도입
- **교육**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 육성
- **보건의료** : 시·군 내에서 중요과목 의사 진료 가능
- **사회복지** :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혜택,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에 접근 가능
- **응급측면** : 30분 이내에 구급차 도착, 112 신고 시 90% 이상 5분 내에 현장 도착
- **문화여가** : 읍·면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 등
- **정보통신**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 등



이와 같이 8대 부문별 기초서비스 항목에 대한 국가 기준이 농어촌지역에서 충족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것이며 이는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